

완전거부와 대체복무: 어느 핀란드인의 관점

카이 라이넨Kaj Raninen은 1990년대 초부터 반군사주의 운동에 참여했고, 현재 핀란드 병역거부자연대(Finnish Union of Conscientious Objectors)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루카 토이보넨Ruka Toivonen은 헬싱키에 사는 트랜스젠더 활동가이자 연구자로 퀴어 이론과 수형제도, 사회사(史)를 연구하지만, 급진적 풀뿌리 조직운동 경험을 자신이 받은 가장 수준 높고 값진 교육으로 여기며, 핀란드 병역거부자연대에서 수년간 활동했다. 여기서 그들은 완전거부(민간 대체복무를 포함해, 징집에 의한 모든 형태의 복무를 거부하는 행위 -웁긴이)와 대체복무에 초점을 맞춘 병역거부 캠페인의 상대적 강점과 약점에 대해 논의한다.

핀란드에서는 아직도 남성에 대한 포괄적 징병이 이뤄지고 있다. 군복무를 하는 사람의 수는 줄고 있지만, 징병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며, 전체 남성의 2/3가량(매년 2만 명)이 여전히 군복무를 한다. 여성은 1994년부터 자원입대를 할 수 있게 됐고, 매년 수백 명이 입대한다. 남성의 약 7~8%가 민간 대체복무를 선택하는데, 그 기간은 군복무 최소기간(165일)의 2배 내지 최대기간(346일) 정도 된다.

1980년대까지 핀란드의 병역거부 운동은 주로 민간 대체복무에 관해 활동했다. 완전거부자는 여호와의 증인 아니면 단체에 속하지 않은 개인들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에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1987년부터 여호와의 증인은 평시에 군복무를 면제받았고, 민간 대체복무 신청자에 대한 신념 검증 절차가 폐지되어 모든 신청이 자동적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동시에 민간 대체복무 기간이 12개월에서 16개월로 연장됐고, 복무 내용을 '군사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목적은 당시 여느 때보다 팽배해 있던 '통합 국가방위' 구상 아래 이를 포함시키려는 것이었다. 민간 대체복무를 하는 남성들은 공방이나 소방서처럼 군복무와 연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복무지에 배치됐다.

병역거부자에 대한 국가의 태도 변화는 곧 운동의 급진화로 이어졌다. 완전거부자가 한 해에 몇 명에서 수십 명으로 빠르게 증가했고, 이것이 1980년대 후반 활동의 핵심 주제가 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많은 유럽 국가에서 병역거부 운동은 완전거부에 관한 활동과 민간 대체복무에 관한 활동으로 양분됐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단체가 대체복무에 관한 활동을 중단했다. 그것이 반군사주의적 관점에서 무의미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반면 핀란드 병역거부 운동 내에서는 민간 대체복무를 병역거부의 범주에서 완전히 제외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부적 논쟁이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운동의 급진화와 새로운 행동의 결과로 1992년에 정부가 대체복무에 관한 개선된 법안을 통과시켰을 때조차 아무 논의가 없었다.

첫 번째 이유는 현실적인 것이었다. 완전거부자의 수가 비교적 낮은 채로 유지됐고(한 해에 100명을 넘는 적이 없다), 이 주제에만 집중하는 것이 운동의 규모를 축소시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보다 중요한 이유는 핀란드 징병의 특이성과 연관된 것으로, 군복무가 유일하게 허용되는 복무 방식으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점점 감소하고는 있지만, 다대수의 젊은 남성이 이런 기대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에는 징병 대상자의 90% 가까이가 군복무를 했고, 지금도 그 비율은 65%를 넘는다. 국가가 모든 형태의 병역거부를 부정적·징벌적 태도로 대하고, 이 현상을 사회적으로 배제하려는 상황에서, 민간 대체복무는 (적어도 핀란드에서의 경험에 따르면) 반군사주의적 의미를 완전히 잃지 않았다. 민간 대체복무를 하는 모든 사람이 군사주의에 적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군사주의는 줄곧 그것을 적대시했다.

민간 대체복무가 운동의 중요한 부분이기기는 하지만, 적어도 1990년대부터 핀란드 병역거부 운동의 지배적인 시각은 민간 대체복무가 반군사주의 투쟁의 효과적인 도구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이 징병제의 작동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핀란드 반군사주의자들은 다른 나라에서의 병역거부 운동의 경험들을 통해 국가가 민간 대체복무를 이용하는 방식을 그것이 의제화되기 전부터 인식하고 있었다. 더욱이 민간 대체복무를 선택하는 사람의 상당수는 자신의 행동을 반군사주의 혹은 반전 활동으로조차 인식하지 않는다. 병역거부 운동뿐 아니라 어떤 종류의 반군사주의 활동에도 관심이 없다. 일부는 대체복무를 선택한 이유가 다양한 '현실적 이유'에 있지, 징병이나 군사주의 자체에 반대해서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유럽의 몇몇 국가(적어도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민간 대체복무를 징병제를 유지하기 위한 값싼 노동력의 원천이자 도구로 이용해왔고, 그 결과 대다수가 대체복무를 선택했다. 독일에서 징병제가 폐지될 당시 대체복무를 선택하는 사람이 군복무를 선택하는 사람보다 많았다. 이것이 독일이 다른 서유럽 국가들보다 늦게 징병제를 폐지했고(2010년). 오스트리아가 아직도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다. 실제로 오스트리아에서 2013년에 징병제에 관한 국민투표가 있었는데, 오스트리아 국민들은 징병제 유지를 선택했다. 아마도 대체복무자가 제공하던 값싼 노동력이 사라지는 것에 따른 비용의 증가가 두려워서였을 것이다.

핀란드 정부가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대신 값싼 노동력으로 이용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이 최근 들어, 특히 2010년 이후 많이 제기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배적인 견해가 되지는 못하고 있다. 핀란드 정부는 복무 기간과 '젠더 평등'의 관점에서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대체복무를 시행하는 것조차 아직 거부하고 있다. 아마 그렇게 되면 민간 대체복무를 선택하는 사람이 더 늘어날까봐 두려워하는 듯하다. 국가의 이런 태도는 민간 대체복무를 원하는 사람의 수가 얼마 되지 않는데도 그들을 배치할 자리는 항상 부족하다는 데서 잘 드러난다.

병역거부 운동 내에 민간 대체복무 관련 활동의 중단에 대한 논의가 없는 와중에도, 핀란드 군사주의는 대체복무를 탈정치화해 이용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유일하게 바뀐 것은 운동의 방향이었다. 운동은 민간 대체복무를 군사주의와 싸우는 전략으로 사용하기보다, 그것이 언젠가 국가의 전략으로서 사회를 군사화하고 징병제를 지탱하는 도구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전쟁 기술의 '진보'와 무기 가격의 상승은 위의 숫자에서 보듯 군복무자의 감소로 이어졌다. 군사주의의 관점에서도 각 연령대의 모든 남성에게 군사훈련을 시키는 것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 그리고 민간 대체복무자가 증가하지 않았음에도(1990년대부터 매년 약 2,500명으로 신기할 정도로 일정했다), 병역면제자는 빠르게 증가했다. 현재 징병 연령 남성의 약 1/4이 어떤 형태의 복무도 하지 않는다. 많은 징병 대상자가 소집이 종료되는 29세가 될 때까지 복무를 유예한다. 일부는 광범위하면서 때로는 모호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면제를 받는다. 많은 징병 대상자가 반군사주의적이거나 국가에 비판적인 견해 혹은 단순히 무관심을 이유로 이러한 출구 전략을 택한다는 것은, 같은 수의 사람이 민간 대체복무를 선택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징병제도의 정당성을 약화시킨다.

핀란드 병역거부 운동에서 대체복무와 완전거부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사실은 대부분의 주요 병역거부 캠페인이 대체복무와 완전거부를 모두 포괄한다는 것이다.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의 캠페인은 완전거부와 대체복무 양자에 관한 활동 모두를 끌어안았고, 가장 큰 행사에서는 둘을 결합하기도 했다. 1990년 봄, 완전거부자 네 명이 단식투쟁을 시작함과 동시에 대체복무자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모든 캠페인은 대체복무와 완

전거부가 동일한 목적을 추구한다는 데 입각해 진행됐고, 대체복무 관련 법률의 개선을 목표로 삼았다. 실제로 이전부터, 일부 완전거부자는 부실한 대체복무법에 대한 항의의 표현으로 병역거부를 했다.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반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됐다. 2000년대 초반의 경우는 병역거부 운동이 1992년에 제정된 구시대적 대체복무법의 개정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할 무렵의 일이었다. 이번에도 조업중단을 포함해 대체복무제에 초점을 맞춘 캠페인들이 전개됐다. 완전거부에 관한 캠페인도 있었는데, 가장 규모가 컸던 것은 벨기에로 도주해 5년간 망명하면서 강제송환과 사법처리를 어떻게든 피해온 완전거부자의 ‘난민 사례’에 관한 것이었다. 이들 캠페인의 공동 목표는 대체복무법의 개선이었다. 이 캠페인은 개선된 법안이 마침내 통과된 2008년에 부분적 승리를 이끌어냈다.

물론 완전거부에 국한된 캠페인도 있었다. 1992~93년에는 징병반대 완전거부 캠페인을 조직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이는 많은 부분 스페인의 인수미시온 운동에서, 그리고 일부는 당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 진행 중이던 ‘징병 폐지 캠페인’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었다. 2010년대의 완전거부 캠페인과 그들의 행동 근거 역시 대체복무제의 개선을 요구하는 데서 완전히 방향을 틀었다. 이렇듯 대체복무 캠페인과 완전거부 캠페인은 서로 깊게 연관된 만큼 차이점도 있다. 완전거부 캠페인은 보통 병역거부 당사자 한 사람 혹은 소수의 개인들에 집중한다. 지금까지 핀란드에 어느 정도 교묘를 갖춘 완전거부자 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개인 중심의 접근은 사실상 이 문제를 제기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두 캠페인의 또 다른 공통점은 양자 모두의 기획과 실행에 모두 완전거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는 것이다.

대체복무에 초점을 맞춘 가장 크고 가시적인 캠페인은 대체복무자들의 조업 중단과 파업이었다. 이런 행동은 특성상 대규모 인원이 동시에 참여한다. 1998년 11월에 있었던 최대 규모의 조업 중단 당시 700명의 대체복무자가 근무지에서 하루 동안 동시에 파업에 참여했다. 대개는 대체복무자의 참여 수준이 대체복무에 초점을 맞춘 캠페인에 참여하는 완전거부자의 수보다도 적다. 또한 핀란드 병역거부자연대 활동가들이 주로 행사를 조직하며, 행사 참가자 중 기획에 관여하는 사람의 비율은 아주 작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넓은 국토에 흩어져 사는 수천 명이 의사결정과 기획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은 (설령 그들이 운동에 관심이 있을지라도) 어려운 일이다. 이 때문에 대체복무자와 접촉하는 최선의 방법의 그들의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완전거부와 대체복무는 행동의 목적과 근거에도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완전거부자는 자신의 행동을 대체복무 시스템의 결함이나 징병제도, 병역거부자의 실제 처우, 군사주의 일반, 혹은 국가권력 전체에 맞서는 일종의 저항 내지 시위로 여긴다. 한편 대체복무자가 가장 흔히 언급하는 것은 효용이다. 그들은 자신의 복무와 무임금 노동이 타인과 사회, 국가, 그리고 많은 경우 본인에게 군복무보다 더 큰 이익을 준다고 설명한다. 그중 다수는 자신이 병역거부자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단순히 대체복무제가 그들에게 더 합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할 뿐이다.

실제로 이런 사고방식은 때때로 대체복무를 군복무와 같은 위치에서 정당한 국가복무의 형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진다. 이것은 결국 병역거부 운동에 대한 비판 담론을 형성한다. 일부 대체복무자는 병역거부 운동의 소위 급진적 활동 및 완전거부자들과의 공조가 대체복무제와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낙인’을 찍는다고 생각한다. 그런 급진적 요구 때문에 사회를 위한 그들의 명예로운 노동이 응당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이유는 병역거부 운동의 방법론이 아니라, 특히 청년과 남성성의 군사화

를 통한 핀란드 사회에서의 남성 징병의 정상화에 있다.

병역거부 단체들 내에도 차이는 존재한다. 개인이 완전거부를 하는 이유는 다양하고, 일부는 대체복무를 통해 국가권력이나 군사주의 일반을 비판한다. 병역거부자의 동기와 거부 방법에 따른 사회적 영향도 각기 다르다. 이런 차이를 근거로, 핀란드 징병제의 맥락에서 대체복무는 군복무의 대안을 상징하고, 완전거부는 저항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어떤 관점에서 볼 때, 핀란드 병역거부 운동은 다른 여러 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병역거부자 개인을 기반으로 한 전략을 채택했다. 그렇다면 이것이 군사주의적 영웅상을 반영하는 또 다른 남성적 영웅 신화의 탄생을 의미할까? 적어도 그러한 위험은 존재한다. 완전거부자의 단식투쟁에 관한 이야기는 영웅 서사의 일종인 순교를 연상케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순교 혹은 ‘반전 영웅주의’는 핀란드 완전거부자들의 캠페인이나 이야기의 지배적 서사가 된 적이 없다. 지난 수십 년간 완전거부 캠페인은 사법체계의 부조리와 병역거부자의 일상적 고난을 주제로 삼았고, 어느 병역거부자의 망명을 단 한 번 사례로 다뤘을 뿐이다.

오늘날 핀란드 병역거부 운동에서는 특히 군사주의를 연구하고 운동의 활동과 구조를 분석하는 데 있어 젠더분석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것은 핀란드 병역거부자연대의 활동 방식을 분석하는 데도 사용됐다. 그러나 그런 관점에서 완전거부나 대체복무 캠페인을 분석하려는 시도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여기서 최소한 젠더분석이라는 주제가 아직 우선 순위로 인식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젠더의 관점에서 대체복무와 완전거부의 차이는 무엇일까? 남성의 주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젠더를 희생하는 일종의 ‘저항적 남성성’은 당연히 반군사주의의 목표를 앞당기지 못한다. 하지만 남성적 영웅 신화에 대한 두려움에 이끌려, 대체복무가 완전거부보다 반군사주의적이고 성인지적이며 페미니즘적인 대안을 상징한다고 선불리 결론지어서는 안 된다.

군사주의적 구조는 궁극적으로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이분법에 기초한다. 여기서 백인(이성애자) 남성은 여성, 특히 유색인종 여성의 보호자로 여겨진다. 이런 이분법은 무슬림 여성이나 때때로 성소수자를 보호한다고 주장하는 최근 서구 군대의 이슬람혐오 담론에서도 명백히 드러난다. 마찬가지로 대안적인 상황에서도 똑같은 이분법이 가치와 태도에 투영되고, 국민 국가의 초석으로 작동한다. 군사주의와 젠더 위계는 이처럼 서로를 지탱하고 재생산한다. 하지만 핀란드의 군사화된 남성성은 젠더뿐 아니라, 민족주의와 백인성(whiteness)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병역거부와 ‘외부인’에 대한 국경 폐쇄에 대항하는 캠페인은 군사주의와 젠더 위계라는 두 가지 모두에 저항하는 투쟁에서 매우 핵심적인 부분이다.

반군사주의자의 시각에서 볼 때 핀란드 민간 대체복무의 결점이 여기에 있다. 그것은 여전히 ‘대체복무’로서 현 체제를 정당화할 뿐, 기초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대체복무자에게 때때로 딱 라붙는 ‘계집애 같은 놈’이나 게으른 히피 등의 고정관념이 군사주의와 애국주의와는 땔레야 땔 수 없는 관계인 남성성의 패권적 모델을 대표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대체복무가 현재 핀란드 사회의 불평등과 젠더 역할을 허무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급하다. 대체복무자 중에는 매우 다양한 사람이 있고, 일부는 자기 노동의 가치가 더 인정받기를 바라는데, 종종 그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젠더 위계를 재생산하는 경우가 종종 생겨난다. 그들은 징병제에 실질적 위협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그 수명을 연장시키고 있기에 공공선을 위한 평화적 노동은 군사주의적 구조를 완전히 해체하지 못한다.

대체복무자는 법적으로 비영리단체 아니면 학교나 병원, 요양원 같은 공적 영역에서 근무하게 되어 있다. 실제로 국가는 대체복무제의 바깥에서 노동의 인종 및 젠더 분리를 훨씬 더 효율

적으로 수행한다. 대체복무자들이 단체와 시설, 정부기관에서 비교적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반면, 예를 들어 이민자들은 선택권 없이 타인의 삶을 위한 저임금 돌봄 노동에 투입된다. 일반적으로, 핀란드에서 공적 영역의 ‘공공선’을 위한 직업은 고도로 분리되어 있다. 거의 보상이 없다시피 한 이런 저임금 노동을 하는 것이 단지 남성이라는 이유로 감옥에 가는 것보다 페미니즘적인지는 여전히 답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다행히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가끔씩 남성 대체복무자가 자신의 권리 증진을 위해 캠페인에 참여하는 여성의 사기를 꺾어버릴 때가 있다. 이는 때로 선의의 질문 형태를 띠기도 하지만(“여성으로서 어떻게 이런 활동에 참여하게 됐는가?”), 최악의 경우 적대적인 추궁이 되기도 한다(“당신이랑 상관도 없는 문제에 왜 끼어드는가?”). 고도로 젠더화된 제도인 징병은 거기에 직접적으로 영향 받지 않는 사람들을 배제하는 경향으로 이어지기 쉽다. 이는 병역거부 활동은 물론, 반군사주의 활동 전반에서 그렇다. 따라서 병역거부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징병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남성에게 더 쉬운 일이다.

핀란드 병역제도는 젠더의 관점에서 볼 때 반군사주의에 특수한 문제를 제기한다. 징병은 시스남성, 즉 태어날 때부터 남성으로 지정돼 살아온 사람에게만 적용된다(핀란드 방위군은 트랜스남성의 젠더 정체성을 무시하고, 그들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병역에서 면제시킨다). 그러나 젠더에 따라 병역에서 면제된 사람도 병역거부 운동에 기획자와 조직가로 참여해 이와 같은 차별에 저항할 수 있다. 캠페인 실행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근본적으로 대체복무 및 완전거부 캠페인에서와 동일하다.

병역거부는 본질적으로 반작용적 행동이다. 국가는 경기의 규칙을 정하고, 언제든 그것을 바꿀 권리를 가진다. 이를테면 병역거부자를 처벌하고 사회적으로 배제할 것인지, 아니면 대체복무의 중요한 자원으로 이용할 것인지에 관한 정책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반군사주의 전략의 하나로서 병역거부는 이 규칙을 멋대로 휘두르는 국가의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기껏해야 국가로 하여금 운동장 전체를 허물어뜨린 다음에 탈징병제 사회에서 완전히 새로운 군사주의 경기를 구상할 수밖에 없도록 압박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 경기를 벗어나면, 병역거부는 도구로서 아주 제한된 능력만을 가지고 있다. 아마도 대체복무 캠페인이 이 문제를 더 빨리 겪겠지만, 완전거부 캠페인 역시 최소한 군사주의가 포괄적 징병제를 더는 필요로 하지 않게 되면 같은 문제에 봉착할 것이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고립된 병역거부가 반군사주의 활동에 충분한 토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지난날 핀란드 병역거부 운동의 지배적 사고방식이었기에 오늘날의 운동은 반군사주의와 연관된 다양한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군사주의와 그 파괴적인 영향에 대한 보다 폭넓은 사회적 분석은 병역거부라는 주제에서도 하나의 젠더를 넘어선 시각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